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영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민변 사법센터 (담당 : 문경원 간사 070-5176-8165 mjc@minbyun.co.kr)

제 목 [보도협조]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날 짜 2021. 09. 09. (총 2 쪽)

보도협조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3. (월) 11:00, 참여연대 아람드리홀

<코로나19 관련 공지>

-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영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민변 사법센터 (담당 : 문경원 간사 070-5176-8165 mjc@minbyun.co.kr)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